

# 자젯값 급등에…전남 곳곳 골재·토석 채취 분쟁

### 나주·곡성 등 신규·연장 허가 놓고 주민-업체 마찰…법정 다툼 비화도 토석 채취 반대 현수막 61장 내건 이장단 총무 1843만원 과태료 폭탄 품귀현상에 '부르는게 값'…강진군, 허가없이 토석 판매한 업체 고발

전남 농촌의 들과 산에서 골재·토석 채취와 관련해 주민과 업체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건설자재 수요 증가로 골재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골재·토석 채취 신규 및 연장 허가 요청이 늘고 있는 탓에 주민과 업체간 마찰이 일고 있다.

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전남에서 허가된 골재채취(942만㎡) 중 바다-하천골재는 없었고 육상골재는 4.8%(45만7000㎡)인 반면 대다수인 95.1%(896만3000㎡)가 산림골재였다.

13일 국토교통부 골재채취 실적에 따르면 전남에서 골재를 채취하도록 허가한 양은 2019년 568만6000㎡→2020년 617만5000㎡→2021년 942만㎡으로 꾸준한 증가세다.

육상골재는 흙의 성분에 따라 불량 골재 우려가 있지만 산림골재는 우량 골재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때문이다.

골재는 하천-산림-공유수면, 기타 지상·지하 등에 있는 암석·모래 또는 자갈로 건설공사의 기초재 료로 쓰인다.

하지만 골재 채취는 반드시 자연을 훼손해야 하고 채취 과정에서 소음과 분진 등으로 지역민들과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바다골재·육상골재의 공급 감소에 따라 점차 산림골재 공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

나주시 다도면과 남평면에선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업체가 채취 연장신청을 하자 인근 주민 10여명이 연장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25일 패소했다. 주민들은 주민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받거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채취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과 경관훼손, 환경오염, 호습기 질한 및 피부염 유발 등의 이유를 들어 연장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개정되기 이전 법의 적용을 받아 동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환경오염,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곡성군 겸면에서는 토석채취 허가를 반대하는 현수막 61장을 내건 이장단의 총무인 김모씨에게 184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2021년 7월까지 한 업체가 곡성군 겸면 운교리의 7개 필지 9만4000여㎡ 부지에서 쇄골재용, 토목용, 조경용 토석 157만5888㎡를 10년간 채취하겠다고 곡성군에 토석채취 허가를 낸 것에 이장단이 반대의 목소리를 현수막으로 게시한 것이다.

강진에서는 골재채취 업체가 채취 현장을 복구하는데 사용하라고 허가를 내준 저수지의 흙을 허가

없이 레미콘업체에 판매했다가 강진군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전남에서는 현재 74곳에서 토석채취 허가가 난 상태로 최근 골재가격 인상에 품귀현상까지 일어 '부르는게 값'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골재는 모래와 자갈에 따라 가격은 약간 다르지만, 지난해에 비해 평균 15~25%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모래의 경우 1루베(입방미터·1㎥)당 지난해 1만7000원 수준에서 올해 2만3000원까지 올랐고 자갈도 1루베당 1만원에서 1만4000원으로 상승했다.

골재가격 상승에는 수요 증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맞물렸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장성에서 자갈을 채취하는 업체 관계자는 "광주에서 지하철골공사와 재개발 열풍으로 골재 수요가 꾸준히 증가했다"면서 "대형 채취장비에 사용되는 경우값과 화약값 상승도 골재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야간에 슈퍼마켓 침입 담배 1500여 갑 절도

### 광주남부경찰, 50대 구속

슈퍼마켓에 침입해 담배 1천 여갑을 훔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남부경찰은 야간에 슈퍼에 침입해 담배를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A(56)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12시 20분께 광주 시 남구 서동에 있는 한 슈퍼의 담을 넘어 침입해 담배 150여 보루를 훔쳐져 혐의를 받고 있다.

절도죄 유효 판결을 받고 수감 생활을 했던 A씨는 출소 석 달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붙잡혔는데,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훔친 담배를 공인 등에서 행인들에게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종교적 이유 로스쿨 면접일정 변경 요청했다 거부당했다면?

## 이의 제기한 수험생, 1심 뒤집고 2심서 승소

종교적인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면접 일정 변경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수험생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승소했다.

일 주간에 면접에 응시할 수 없다며 오후만 마지막 순번에 배치해달라는 내용의 '입학전형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1부는 A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인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대학 측은 입학 전형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려 할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거부했고 오전 면접에 불참한 A씨를 불합격 처분했다.

A씨는 2019년 7월 법학특성시험을 치른 뒤 전남대 로스쿨에 지원했다.

재판부는 모집 요강 상 이의신청의 한계가 불분명하고 전남대 내 다른 대학원, 다른 로스쿨 사례를 볼 때 전남대가 수험생에게 기회를 줄 수 있었음에도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토요일 오전으로 면접 일정이 잡히자 토요일 일몰 이후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면접에 응시하지 않았고 결국 불합격했다.

재판부는 "한국외대 로스쿨은 관련 판결 및 인권위 결정을 고려해 A씨의 면접 일정 변경 요구를 수용했다"며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역시 이의신청 대상을 지원 자격과 전형 방법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남대 로스쿨이 다르게 규정해야 한다고 불 특별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듬해인 2020년 10월에도 전남대 로스쿨에 입학원서를 제출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면접 일정과 관련한 구제 요청 진정서를 함께 제출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요구가 입학 절차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며 "전남대의 거부 처분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한 간접 차별에 해당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배했고 원고에 대한 불합격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전남대는 인권위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았으나 공정성을 위해 무작위로 면접 순번을 결정하는 학사 규정대로 A씨의 면접 일정을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A씨는 면접 전 대학 측에 제철일인식예수제림교인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안식일인 토요일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추석 뒤끝 재활용품 산디미

광주 북구청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 직원들이 13일 북구지역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버려진 재활용품 물량 등을 확인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성범죄자 거주지 변경 능력 공개한 경찰

### 광주·전남 관리 소홀 8건 적발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인 성범죄자의 거주지 변경 사실을 뒤늦게 알리는 등 성범죄자 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국 111개 경찰서에서 211건의 신상정보 변경 송부지체 사례를 확인했는데 이 가운데 광주는 3건, 전남은 5건이었다.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의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에 대한 전자기록을 지체 없이 법무부에 송달하고 3개월마다 대상자를 직접 대면해 제출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광주 관상경찰서는 지난해 1월 4일 공개 대상자

로부터 제출받은 주소 및 실거주지 변경 정보를

43일 지난 같은 해 2월 16일에 법무부 송부했다. 같은 해 9월 28일에도 변경된 주소지를 20일 늦게 송부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특히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해 5월 6일 접수된 주소 변경 정보를 그로부터 70일가량 송부하지 않았다. 곡성경찰서, 목포경찰서, 고흥경찰서 등에서도 최소 15일에서 최대 48일까지 송부가 지체됐다. 교정시설에 수감된 공개 대상자의 수감 사실을 법무부에 알리지 않아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은 집 주소가 공개된 사례도 광주에서 2건이 발생했다.

서부경찰서는 전자발찌 피부착자인 A씨가 지난해 11월 1일 절도 혐의로 수감된 이후 같은 달

19일 보호관찰을 통해 교도소 수감 사실을 확인했지만, 법무부에 알리지 않았다. 감사원 점검이 들어간 지난 2월 13일까지도 해당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에 반영되지 않아 수감 이후 105일간 수감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북부경찰서도 지난해 12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로 대상자가 수감된 이후, 점검 과정에서 수감 사실을 파악했으나 법무부에 알리지 않았다.

경찰청장 관계자는 "수감자의 경우 교정시설에서 신상정보를 법무부에 송달해야 한다"며 "유관 기관들과 협조해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송달된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여성가족부로 전달돼 성범죄자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전세버스에 치여…횡단보도 건너던 노인 사망

### 서부경찰, 달아난 운전기사 검거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인을 치숨지게 하고 달아난 70대 전세버스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13일 운전 중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A(75)씨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불집야 조사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20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월드컵경기장 후문 인근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도중 보행자 B씨를 치 숨지게 하고 달

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버스에 치인 여성은 녹색복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전세버스 회사에 연락을 취해 운전자를 특정했고, 연락을 받은 A씨는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보행자를 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른 일시정지를 위반하고 우회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개>** \*QR코드를 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하십시오.

사건번호	물건 번호	매 각 물 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22타경 66904	1	담양군 대덕면 운산리 689-2 210㎡ [공부상지목 "전"이나, 현황 "전일부두로", 향후원상회복명령발효가능성 있음(사실조회 신청사정조)] 동소 689 68㎡ [지적도상정지]	전	7, 125, 000 7, 125, 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2타경 67761	1	화순군 동백면 연연리 산19 31140㎡	임야	59, 166, 000 59, 166, 000	연고대상분소소재, 영지
2022타경 68375	1	곡성군 입면 송전리 1352-6 2696.7㎡ [장세철2/13지분전부,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10, 786, 620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 1회제한
		곡성군 입면 송전리 222-34 161.4㎡ [장세철2/13지분전부, 농부상지목전이나, 현황황"기타"]	전	1, 589, 120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 1회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요
		곡성군 입면 송전리 109-1 282㎡ [박순조3/10지분전부, 일부도시설계획에서적용]	대	1, 316, 282, 000	1, 316, 282, 000
2022타경 3705	1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 159-1 1322㎡ [현황 "주거나지, 농지취득자격증명요, 공부상지목"답"이나, 현황 "주거나지"]	답	502, 360, 000 502, 360, 000	인접토지와경계불명하여정확한경계측량요

사건번호	물건 번호	매 각 물 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22타경 66584	1	나주시 중앙로 30 1소 [소매정밀일몰승적점] 179.38㎡ 2층 [다세대주택] 165.46㎡ 3층 [다세대주택] 165.46㎡ [현황 176.16㎡] 4층 [보일러실] 128.84㎡ [지목 "전"과 "답"의 합계 49㎡]	공동주택, 관리시설	359, 472, 000 359, 472, 000	일괄매각, 세시외 건물포함,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 1회제한
		박순조3/10지분전부, 세시외 건물일부매각 대상자인 "106-1, 130-2" 소재, 건물3층부분 공부상면적 165.46㎡ 이나 현황 176.16㎡	대	1, 589, 120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 1회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2타경 4269	1	북구 신안동 253-7 583.1㎡	대	1, 316, 282, 000	1, 316, 282, 000
		북구 중흥로 17번길 2 1층 347.25㎡ 2층 152.1㎡ 6㎡ [공부상 "제조업소" 이나 현황 "자동차부품상사", 2층면적공부상 "152.16㎡" 이나 현황 "약31.05㎡"]	제조업소	1, 316, 282, 000	1, 316, 282, 000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대수권인이 매각절차결정일자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법원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합형할 경우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② 공유자가 공유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전매되는 매각일에는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공유자 및 지분보유자에게 채권권 행사할 수 있음. 매각일에는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공유자 및 지분보유자에게 채권권 행사를 할 수 있음. 매각일에는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공유자 및 지분보유자에게 채권권 행사를 할 수 있음. 매각일에는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공유자 및 지분보유자에게 채권권 행사를 할 수 있음.  
 2. 매각절차: 2022. 9. 28. (수) 10:00  
 3. 매각절차: 2022. 10. 5. (수) 10:00  
 4. 매각절차: 광주지방법원 입찰방형  
 5. 매각방법  
 ① 입찰방법: 비공개 입찰방형에 사전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보증 기한, 납입하는 보증금의 금액 등 기재하고 입찰권을 함께 입찰부부에 넣어 입찰하여 제출한다. 매수신청의 방식은 최저매각가격의 1% [10라이트]에 해당하는 금액과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으로 준비하거나 지급보증계약서를 제공한 문서 [양식]를 준비하여 넣는다.  
 ② 입찰의 신청은 공표된 매각 공고일로부터 매각 전날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공표된 매각 공고일로부터 매각 전날 오후 5시 이후에 접수된 입찰서는 취급되지 않는다.  
 ③ 입찰의 신청은 공표된 매각 공고일로부터 매각 전날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공표된 매각 공고일로부터 매각 전날 오후 5시 이후에 접수된 입찰서는 취급되지 않는다.  
 ④ 매각대금의 납입은 매각 당일 오전 10시까지 가능하며, 매각 당일 오전 10시 이후에 납입한 매각대금은 무효로 본다. 매각 당일 오전 10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매각대금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 매각 당일 오전 10시 이후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매각대금 반환신청을 할 수 없다. 매각 당일 오전 10시 이후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매각대금 반환신청을 할 수 없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가 금액을 일정한 가격 이하로 매각할 경우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② 매각대금 납부 후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 납부 후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② 매각대금 납부 후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8. 주의사항  
 ①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②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⑤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⑥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⑦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⑧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